



북한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동향분석팀 (연락처: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위원 dryoon@kiep.go.kr, Tel: 3460-1068)

주요 내용

- ▣ 북한의 핵실험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켜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이탈을 초래하여 금융자산의 가격하락,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시장에까지 그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은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등 관련 주요국들에서도 북한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증가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신용평가기관들도 일단 기존 신용을 유지하고 있음.
 - 과거 외교안보 사안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이었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수위에 따라 리스크의 점증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실물시장에 대한 영향도 배제하기 어려움.
- ▣ 북핵상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미북관계는 대화보다는 제재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제재의 수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북한은 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하여 양자간 대화를 통한 해결가능성은 현 부시정권하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제재의 경우 관련국들이 합의에 실패하여 국제적으로 조절된 수위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주도의 개별적 제재가 시행될 경우, 동북아 지역내 안보 리스크가 증가하는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공조, 특히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조율된 제재와 안보분야 협력의 공고화를 시장에 확신시킬 필요가 있음.

1. 핵실험과 한국경제의 관계

- 북한의 핵실험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실물시장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하여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시 실물 시장에도 그 영향이 전가될 것임.
- 금융시장에서의 영향은 금융자산에 투자한 자금이 이탈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격을 하락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해외이탈로 환율을 상승시키는 현상을 가져올 것임.
- 자본의 이탈로 국내유동성이 감소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부의 감소효과로 인해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고, 북핵문제의 지속은 소비심리 위축과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하여 경기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country risk를 높게 산정하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경기둔화를 가속화함.
- 상기 언급한 부정적 영향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리스크 증가, 경기하강 성장률하락 등의 효과가 상호 작용하여 국내외투자자들의 투자위축 및 소비심리 악화를 야기함으로써 경기둔화를 가속화하는 연쇄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북한의 핵실험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향후 한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내용과 수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정치적 변수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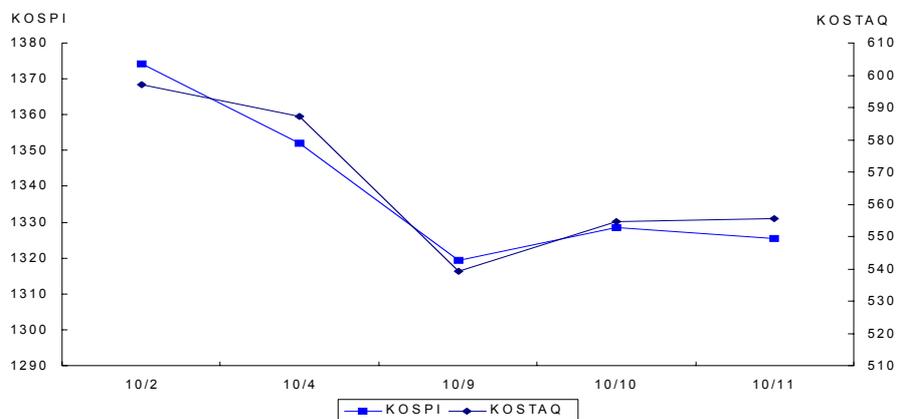
2. 금융시장의 반응

가.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

- 북한의 핵실험이 발표된 9일 코스피 지수는 32.60포인트(2.41%) 하락한 1,319.40, 코스닥지수는 48.22포인트(8.21%) 떨어진 539.10으로 마감되었으며 한때 주식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져 코스닥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함.

- 그러나 주식시장의 매도는 주로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야기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우위를 견지함으로써, 중장기 경제 전망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을 보임.
 -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764억원, 코스닥시장에서 748억원어치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363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30억원어치를 순매도함.
 - 이에 반해 개인은 양 시장에서 각각 6,023억원과 666억원어치를 순매도하여 가격하락을 주도함.
 - 실제로 북한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재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었으나 단기적인 효과에 그쳤던 경험과 향후 변동에 대한 관망의 필요성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비교적 객관적 태도를 유지한 것이 그 이유로 판단됨.
- 핵실험 후 이틀째인 10월 10일부터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모두 북핵 충격에서 벗어나며 사흘 만에 반등하였고, 개인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외국인은 사흘째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상승을 견인함.
 - 11일 들어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했고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으나 2차핵실험설 등으로 등락을 보이는 혼조세를 지속함.
 - 투자주체 면에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매도우위를 유지하여 향후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임.

그림 1. 주가지수 변동 추이



나. 해외 주식시장 동향

- 미국 주식시장은 북핵문제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모습으로 내부적인 경제여건을 중심으로 한 지수변동을 보임.
 -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11,867.17로 지난 목요일에 세웠던 사상 최고치를 다시 넘어섰고 NYSE에 상장된 주식 중 1,802개 가격이 오른 반면, 1,486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거래량은 24억주로 나타남.
 - 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시장은 비교적 조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Dow component인 Alcoa를 시작으로 미국 기업들의 3/4분기 earnings 실적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Thompson Financial의 survey에 의하면 S&P 500 기업들의 earnings가 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4분기 연속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두자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유가는 Light sweet crude 11월물이 NYMEX 배럴당 \$1.44 하락한 \$58.52로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OPEC의 감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10월 10일 S&P 500지수는 2.76포인트 상승한 1,353.42를 기록했으며, NASDAQ Composite Index는 3.66포인트 상승한 2,315.43을 기록하며 마감.
 -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3/4분기 실적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유가 하락세가 이슈가 되는 등 북핵과 관련한 이슈는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북핵과 관련한 이슈보다는 기업의 실적치 예상,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9월 고용 통계, 인플레이션의 방향, 그리고 이에 따른 Fed의 금리정책에 대한 예상과 유가 등 거시경제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유럽의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프랑스 CAC-40지수는 0.5% 상승한 5,309, 독일 DAX Xetra 30 지수는 0.6% 상승한 6,117을 기록하였으며 영국 FTSE 100 지수는 0.7% 상승한 348.22를 기록하여 5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였음.
- 아시아지역의 주식시장도 상승세로 화요일의 장을 마감하였음. 9일 휴장하였던 일본 시장은 Nikkei 225 평균이 0.25% 상승한 16,477.25, 홍콩의 항셱지수는 0.84% 상승한 17,823.0,

우리나라 KOSPI 지수는 0.68% 상승한 1,328.37, 호주의 S&P/ASX 200 지수는 0.95% 상승한 5,248.60을 기록하였으며 Shanghai Composite 지수만이 0.03% 하락한 1,784.86을 기록하였고 대만은 휴장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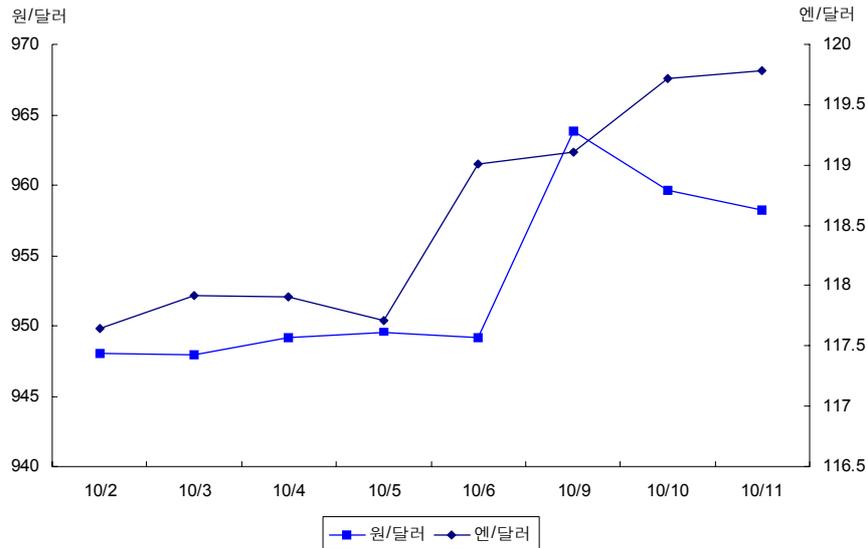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자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고 해외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반응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적 리스크나 세계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다. 외환시장의 반응

-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직전 거래일인 10월 4일보다 14원 80전 오른 963원 90전에 거래를 마침으로 하루 상승폭으로는 지난 2004년 12월 8일의 17원 상승이후 22개월만에 최대폭을 보였음.
- 이러한 급격한 변동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기 때문임.
- 특히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지정학적 우려감으로 손절매성 달러매수에 나선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역외세력들이 공격적인 달러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북한 핵실험 이틀째인 10일에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대미 원/달러 환율이 전날 종가 대비 4원 40전 하락한 959.50원을 기록하여 장을 마감함.
- 원/달러 환율은 북한 핵실험의 충격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하락 조정을 받았는데, 전날 누적된 매수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당분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일방적인 하락을 제한하였음.
- 원/달러 환율은 9일보다 2원 하락한 961.90원으로 출발해 오전중 958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역외 달러매수세로 인해 낙폭이 줄어들던 중 수출기업들의 달러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960원 이상 오르는 것을 제한했음.

- 이틀째 국내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들이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역내외 참가자 모두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태도를 보여 환율은 반등과 재하락을 거듭하였고 뚜렷한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혼조를 보였다.

그림 2. 대미달러 환율 변동 추이



- 북핵실험 삼일째인 10월 11일에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등락을 거듭한 끝에 전날 대비 1.30원 하락한 958.20원으로 거래를 마칩.
-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50원 상승한 963.00원에 거래를 시작하여 장 초반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963.8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2차 핵실험이 오보로 판명나고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외세력의 매도세 전환에 힘입어 958원대로 떨어짐.
- 북핵 문제가 진행형으로 남겨지면서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며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 조짐을 보일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북핵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환율의 추가상승 기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업체들의 네고 공세 역시 만만치 않은 강도로 유입되고 있어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외환시장은 논리적으로 접근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북한 핵위협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10월 10일 전 거래일인 10월 6일의 118.03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119.19엔으로 마감하여 2006년중 최고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10월 11일에도 119.56엔을 기록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그러나 엔/달러 환율의 상승은 북핵의 영향보다는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데 영향받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이처럼 외환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되찾은 것은 이번 북핵 사태가 군사적 대치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임.
- 일본 관방장관은 유엔이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CNN 등 외신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 범위가 도쿄, 서울 등 인근 대도시를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사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함.
- 또한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당장 북한과의 전쟁에 나설 여유가 없고 이란의 핵 위기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선부른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보임.
- 여기에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의 확산 역시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줌.
-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에서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찾기 힘든 상태로 북핵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얼마나 빨리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며, 현재와 같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단기적으로 환율의 추가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3. 북한 핵실험 관련 국제투자은행 평가 및 전망

-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amp;푸어스(S&P)는 9일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리스크의 향후 변동이 더 주목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임.
- 무디스의 토마스 번 부사장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견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면 이번 핵실험이 한국의 신용도 관련 펀더멘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함으로써 향후 변화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S&P의 아시아 지역 담당 오가와 다카히라 이사도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 직후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한국금융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나 이번 핵실험이 신용등급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우선 북한의 핵실험 자체보다는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당장은 신용등급의 변화가 없더라도 일단 리스크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
-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Citigroup 등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에는 (1) 7월의 미사일시험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군사적 credibility를 유지하는 동시에, (2) 이전까지 미국이 핵보유 국가들에 대해선 어떠한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취한 선례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3)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양자회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함.
-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국제투자은행들은 금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한국의 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volatility)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함.
 - 원-달러 환율의 경우 금번 사태와 거시경제 상황(경상수지 적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완만한 평가절하 추세를 보일 것이나 급격한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지정학적(geopolitical) 요인으로 인해 당분간 달러 및 유로화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금리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한국의 콜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제 둔화 및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내에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급속한 자본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 움직임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측함.
- 북 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불확실하며 이는 핵실험 이후 전개될 관련국들의 정치적 대응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함. 즉 이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여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 그리고 중국의 경제제재 참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봄.

-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로 해상봉쇄나 surgical strike와 같은 군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신 원조 중단, 북한선박에 대한 제한적 항해 금지 및 해상조사 강화와 같은 경제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향후 북핵 사태의 파장을 결정할 가장 주요한 변수로서 중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의 제재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며 군사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 핵실험으로 인한 파장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움직임임. 즉 중국은 한국의 군사적 경계수준 제고, 일본의 우익 세력 대두, 미군의 영향력 확대,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 등 각국의 군비경쟁 가속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군사적 확대에는 경계를 나타낼 것임.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미국의 세력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대만독립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일본이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경우 조어대(센카쿠 열도) 및 자원 문제와 관련해 더욱 자신을 갖고 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국제투자은행들은 과거 한반도를 둘러싼 핵위기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볼 때 금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 1차 핵위기(1993~94년) 당시에는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 자본시장의 개방화 및 자유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임.
- 북한의 NPT 탈퇴(2003년 1월) 당시에는 1~3월 사이에 원화가치가 7.2% 하락한 바 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 하락, 주가하락(KOSPI 650 → 515)이 이어짐. 하지만 6자회담 개최 합의 및 이라크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3월 이후 시장이 이전수준으로 급격히 회복 4월(KOSPI 620)된 바 있음.
-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발사 당시에는 시장에 별다른 충격이 없었음.
- Moody's, S&P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금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국제금융시장의 반응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임.

- 결론적으로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왔으므로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따라 금융시장 반응 및 신용등급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평가함.

4.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관계 예상 시나리오

- 북한의 핵문제가 향후 우리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달려 있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① 북한과의 대화, 또는 ② 대북 제재 강화임.

- 북한과의 대화

- 현재 단계에서 핵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간 불신에서 시작된 문제로 향후 북미간 관계개선에 진척이 없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북한과의 신뢰구축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포기 외에도 인권, 미사일, 재래식 군비 등 모든 이슈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먼저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현재의 매우 상이한 의견 차이는 대화를 통한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설령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장 차이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 부시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은 오히려 부시정권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차기 정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북 제재 강화: 현재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대북 제재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음.

- UN을 통한 전면적 경제제재: 미국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금융제재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을 전면적 봉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현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음.

- PSI등 비확산차원의 대북압박: PSI,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전략물자수출 규제 등 비확산 차원의 대북압박을 강화할 수 있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PSI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각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실시중인 규제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수 있음. 미국은 이 조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각 국가들도 북한과의 대북거래를 회피하고 북한에 대한 용선 회피 등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군사적 제재: 군사적 제재조치로는 한반도 주변 미국의 군사력 증강배치, 한미 또는 마일의 연합훈련 강화를 통한 압박, PSI와 함께 해상봉쇄를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pin point 공격을 고려할 수 있음. 군사적 제재수단에서는 PSI와 해상봉쇄,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등은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핵시설에 대한 공격 등은 한국과 중국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5. 향후 변화 전망

-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향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와 현 상황이 어느 정도로 장기화될 것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나 조속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방향은 일단은 ‘대화’ 보다는 ‘제재’ 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제재의 방법 중에서 ‘대북 경제제재 강화’, ‘군사행동’ 등의 시나리오 가운데, ‘대북 경제제재 강화’ 의 시나리오가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 를 시도할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수준의 해상봉쇄 등을 시도할 것인지 여부와 한국과 어느 정도 조율된 정책을 시도할 것인지 등에 따라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받을 것임.
-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징계에 관련국들이 동의하고는 있으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기가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식에서도 이견이 예상되므로 현 상황이 조기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금융시장에 발생한 충격은 유엔의 제재관련 논의에 대한 중국의 동의 여부, 한국정부와의 조율 여부 등으로 인해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일단 안정국면으로 들어섰다가 제재의 수위에 따라 다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북한발(發) 위기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해 왔으나 미국의 대응수위가 이전과 달라질 경우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탈, 투자감소, 신용등급 하락 등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커질 수 있음.
- 한국의 대응방향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유지하되 미국과 협력하여 균형적인(balanced) 제재를 취함으로써, 한국경제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있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유의점이 될 것임.
-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의 결정이나 금융시장의 자본이동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며,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공조관계가 한국경제의 안정에 가장 중요변수가 될 것 임.
- 시장, 특히 금융시장은 참여자들의 기대에 의해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므로 시장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히 미국과의 공고한 협력의 모습이 요구됨.